

1994년도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  
『UR타결과 농업기계화』에 관한  
토론회 발표문(1994. 2. 3)

## 토 론 내 용

## 목 차

지정토론 : 이상우 (충남대 교수) .....	99
지정토론 : 김남훈 ((주) 한성농산 대표이사) .....	100
지정토론 : 박남종 (농업기계화연구소 이용조사과장) .....	105
지정토론 : 허근 (안성군 기계화 전업농 대표) .....	108
지정토론 : 고무창 (농협중앙회 농기계사업단장) .....	110
지정토론 : 이호근 (김포검단 두레위탁영농(주)) .....	112
지정토론 : 정만태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115
지정토론 : 김상태 (동양물산기업(주) 부사장) .....	117
종합토론 : 김필삼 (대동공업(주) 기술연구소 과장) .....	118
김상태 (동양물산기업(주) 부사장) .....	119
이광식 (금성전선 이사) .....	120
노상하 (서울대 농공학과 교수) .....	120
박남종 (농업기계화연구소 이용조사과장) .....	121

【발표 1 : 농업의 본질적 가치와 농정 방향】 : 김성훈(중앙대 산업대학원장)

【지정토론 : 이상우 교수(충남대 교수)】 : 방금 주제발표 내용은 UR농업협상이 현재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내용적으로 사실상 타결되지 않았으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R 농업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보호장치는 이제 사라졌고 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 국제 경쟁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제경쟁은 바로 농업선진국과 경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 여건은 선진 농업국과 비교할때 우리나라 모든 농민이 영세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영농규모, 농업기반사업이나 영농자금, 농촌의 인적 자원 등 모든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농가는 모두 영세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가격의 고가로 인하여 국제 가격에 비해서 4배 또 축산물의 대표적 산물인 쇠고기는 2.4배, 다소 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는 1.6배, 또 우리가 즐기는 닭고기도 1.2배, 곡물이나 과일, 채소, 양념류 등 어느 하나 국제경쟁을 갖춘 품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국제 경쟁은 우리나라 농민에게 농업 포기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학자들 중에는 수입자유에 따른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의 하락폭을 매우 미미한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10년 유예기간의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이미 국제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농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농민에게만 맡겨서는 국제경쟁에서 아무런 희망도 대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제안을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기반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선진농업국의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사업으로는 기계화를 전제로 한 논과 밭의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경지정리, 수리사업, 농로 및 도로정리사업을 앞당겨서 준비하고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시설농업과 축산시설은 시설비를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설계, 관리토록 해서 농민은 이 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분 만큼은 시설 내구연한 동안에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행사하게 한다면 정부 자금지원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농민은 농축산물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경영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경자유전의 개념의 폭을 확대해서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경제 범위를 농민을 포함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특정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관련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농지취득도 허용하고 기업농도 육성 장려하여 기업농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농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농지를 일정기간내에 매수 관리하도록 의무항을 만드시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농지투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UR 농업협상이 타결된다면 많은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것인데, 농산물의 수입으로 생긴 수입금은 반드시 농업기금으로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상인 또는 기업이 농산물의 국내 가격차이로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질때, 우리 농촌의 기반 붕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사기에 직접 관련이 되므로 농산물의 수입은 반드시 어떤 국영무역의 형태로 합리화 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진흥재원으로 활용화 해야 되겠습니다.

**【지정토론 : 김남훈((주) 한성농산 대표이사)】** : 저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세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업을 일시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산업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인구가 70%일때, 농업 생산이

GNP의 50~60%일 때의 사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곡물이 우리 앵겔계수의 50~60%를 차지할 때의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농림수산부에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루에 쌀을 먹는 쌀값이 커피 한잔값이 안된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수신표를 투입해서 해방후 지금까지 농업을 도와왔지만 지금 농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왜 그동안 문제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농민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크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눈에 보이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나,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거환경, 경지정리, 공단조성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법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됩니다. 상한제, 농지거래의 자유, 농지담보의 자유, 농지이용의 확대, 경제작물 소개 및 재배법, 판로개척이 없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익이 없는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걸 지으라 하는 것도 무리이고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추진하려는 대규모 기업영농은 거의 실패할 걸로 봅니다. 30정보까지 상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30정보이면 약 9만평입니다. 그걸 이만원씩 주고 산다고 해도 약 18억원을 주고 사야 합니다. 기계까지 사려면 약 20억원이 듭니다. 20억원이 있는 사람 같으면 농사짓지 않습니다. 또 20억원이면 농사 지어 은행 이자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기계만 가지고 농사가 됩니까? 농사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논이라는게 각자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각자가 천평, 이천평 가지고 있는데 기계화를 촉진한다고 상한제를 철폐한다는데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사람은 팔고 저사람은 안팔텐데 그러면 기계화가 안됩니다. 지금 자유 민주주의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발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일본 같은 데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물도 다양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쌀 한가지만 먹습니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농기계도 다양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등 대량생산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연계해서 대기업에서 판로나 자본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정에서 저금리로 농민을 그동안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금리가 18%, 20% 할때 5%는 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는 10%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금리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계구입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농업생산에 이익이 없는데 기계를 그냥 준다고 해서 농민이 잘 살수 있습니까? 정부가 돈이 있다면 물론 보조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의존심만 높여주는 일부의 보조보다는 필요한 농기계는 무엇이든지 모두 100% 장기 저금리로 용자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균 회장】** : 두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교수께서 논평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훈 교수】** : 이상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지난번에 1월 19일에서 21까지 UR 재협상 (최고기 재협상)에서 우리나라 축산국 대표들이 워싱턴에 갔습니다. 지난번 12월 15일 UR 잠정 타결때 빠트렸던 것, 협의하지 못했던 것을 협상하자고 해서 우리 대표들이 갔는데 거기서 합의해 주고 온 것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던 송아지, 소도 개방하라 해서 추가 협상해주고 왔습니다. 또 민간업체들에게도 금년부터 포장육 판매를 허용하라고 해서 그것도 합의해주고 왔습니다. 그것을 2월 15일 GATT에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 포함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산국에 이원목 과장이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정부에서나 언론에서 한 말을 학자들이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원할때는 재협상이 되고 우리가 말할 때는 다 끝난 일이라는 사고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김남훈 사장님이 아주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정보 까지도 규모를 크게 하고 미국 호주처럼 150정보, 200정보는 못해도 100정보 까지는 크게 하자는 이야기가 민자당, 경제기획원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정보 이상까지는 하자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쌀 생산비가 미국하고 비교하면 규모 때문에 생기는 생산비 차이가 아니라 토지 용역비가 우리가 미국 보다 10배가 비싸다 보니, 미국과 우리의 쌀 생산비가 3.3배 차이가 납니다. 3.3배의 절반이 토지 용역비 사용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자유롭게 땅을 팔도록 해서 토지 가격을 올리게 해서 한몫 지어서 농민들을 떠나게 해서 100정보, 20정보로 농사짓을 사람이 땅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져서 규모는 미국처럼 커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어느정도 경쟁력은 붙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근본 원인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규모를 키우는데 반대는 없지만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규모를 키우도록 하고 품질과 안정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에서 뒤지면 품질과 안전성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번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상우 교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농업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안해 놓고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보다도 관개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밭은 포함도 안되어 있습니다. 관개수리, 배수도 안되어 있고 더우기 경지정리도 다시 재정리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없다고 농민에게만 탓을 합니까? 땀을 막고 수로를 만들고 경지정리하는 것이 누구의 과제입니까? 우리나라만이 그동안 농민들에게 경지정리 비용을 얼마씩 내도록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경지정리와 관개수리는 도로 건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고유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가 세금을 다 털어서라도 생산기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기계화도 될 것입니다. 또 생산자재도 국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생산자재도 싼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농산

물은 수입개방 해놓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자재는 막아놓으면 됩니까? 그것도 외국처럼 관세는 안받아야 합니다. 축산기자재, 비료, 사료는 외국처럼 관세를 안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업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기업농이라 하면 요즘은 재벌들이 주장하는 기업들이 농사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잘못 오해될까 무서워서 기업농이라는 것은 농업경제 학계에서는 대단히 선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 농업 목적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일반 자기 품도 계산제대로 않고 농사짓는 농민보다 얼마만큼 생산비가 적게 들 것인가 궁금해서 현대 서산농장에서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땅 값을 계산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냐, 균형이냐 차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UR정책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UR에서 허용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농약 및 비료의 구입 보조금은 UR에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또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보조,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자유로운 시장 유통을 저해시키는 보조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는 것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환경이 유지되고, 공기가 정화되며, 산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골이 무너지지 않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서 직접 농민에서 주는 것을 직접농가소득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선진국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UR 타결을 전제로 해서 기존의 보조 정책을 직접 농가 보상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또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조하라고 하면 수입 판매금을 농민들에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제까지 EC라는 나라가 그래왔고 일본에서도 국영무역이라고 해서 일본도 밀 등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한국보다도 3배 가격으로 비싸게 팔고 그 차액으로 밀, 보리 농사를 도와 주었습니다. UR이 제대로 될 경우 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방되기 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든지 UR이 허용하는 것, 못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농업은 규모가 작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호주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는 전부 망하라는 말입니까? 그 방법이 EC가 만들어 낸 방법, 일본이 만들어 낸 방법입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농업을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지역개발 차원을 통해서 농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정말 농민을 살릴 의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넘겨주고 세수원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또 생산자 조직이 자구차원에서 농민을 어떻게 돕고 말고 UR에 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UR에 저축되는 예산은 생산자 조직인 농협, 축협에 주어야 합니다.

【고학균 회장】 : 김성훈 교수께서 지금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류관희 교수께서 농업기계화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2 : 농업기계화 전망과 방향】 : 류관희(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지정토론 : 박남종(농업기계화연구소 이용조사과장)】 : 저는 우리나라 농업기계 정책이 근본적인 철학이 없이 농업기계 전반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는 농사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크게 보아서 벼나 밭작물과 같이 규모화가 용이한 토지 이용형 농업이 있고, 또 시설원예, 양계, 양돈 등 토지 전략적 농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설 장치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계의 대상을 이 두가지 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대형기계화, 규모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회

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 농업은 쌀농사이지만 이것은 濕潤農業이 아닙니다. 기후가 우리와 전연 판이하기 때문에 건답상태에서 경운, 쇠토한 다음에 물 넣고 벼 뿌리면 끝납니다. 일본, 우리나라, 동남아 일대는 포함해서 몬순기후의 濕潤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형기계화에는 문제가 있고 또 얼마까지가 대형기계입니까? 50마력 까지가 대형기계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화율이 20% 정도되는 70마력, 100마력 까지도 일선에 들어가고 있는데 수도작에는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일부 밭농사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농사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선진국에서 이런 전래가 없는가? 제가 일본을 조사해 봤습니다. 일본도 논농사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마력 이상 거의 없습니다. 또 월남에서도 기계화를 해서 식량증산을 하겠다면서 70마력 이상 대형트랙터를 대량 수입을 했습니다. 濕潤지역이라 빠져서 안됩니다. 그 뒤에 일본에서 전략적으로 베트남에 트랙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면적을 계산을 하면 50마력 이상 로우터리가 별로 없습니다. 본체만 생산하고 로우터리는 생산 안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면적이 얼마가 되는냐 하면 20~25 ha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경지정리를 최대한 해서 기계 포장 효율을 높인다면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농업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일본 것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규모화하더라도 포장 효율이 15%이상 증가 안됩니다. 현재의 20~25ha가 잘해야 30ha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순년지대의 논농사에서 대형트랙터를 어느 수준까지 들여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정창주 학장께서 2~3년 동안 계속 기계화 측면에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일본이 지금 100m x 30m 해서 900평입니다. 900평이 된 이유는 배수가 잘되서 논위에 답전 방식으로 다른 작목도 심어야 하는데 그때 최적이 100m x 30m 입니다. 그래야 벼 수확한 다음에 다른 작목도 잘되고 배수가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트랙터로 되어서 일본에서도 1 ha 이상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1 ha 에서 3 ha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로우하우나 기술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70만ha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논의 경사도, 배수성, 토성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과연 지역별로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인가? 전국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느 지역에서 경지정리를 한다면 그 표준에 의해서 세부 설계가 되면 되는겁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되어서 패키지로 충분합니다. 학계나 농어촌진흥공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연구를 최단 시일내에 빨리 하여 줄것을 제의합니다.

또 포장작업에 있어서는 기업농이나 전업농이나 트랙터를 부리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면적 그 자체를 전업농에 응용하면 됩니다. 전업농에 응용한다면 기계비용과 수입이 같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비는 회수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기업농을 했을 때에는 토지 빌려야지, 사람도 사 써야지 이것 저것 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을 가끔 들먹거리는데 미국의 농업은 절대 기업농이 아닙니다. 왜 미국은 쌀을 포함해서 다른농산물에 세계를 석권하면서 경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업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규모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영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160만 농가 중에서 기껏해야 70만이 될까 말까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한농가에도 거의 20만 ha의 정도의 경지는 경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업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용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생산자 조직이건 생산자 법인이든 전업농이 협동하면 됩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잠정적이고 어떻게 자기 토지도 없는 사람이 품종을 선택하고 작업체계를 세웁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논농사를 대신 지어준 사람이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일시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업농 중심의 이용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가 몇가지가 있겠는가? 기계화에는 기계화농업과 영농기계화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농기계화란 무엇인가? 현재 인력으로 하던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계화농업이란 무엇인가? 기계가

주동이 되어서 기계에 맞게 품종 개발, 재배법 개선, 기계화 경영을 하기 위한 조직 이것이 기계화농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계나 장치 없이 농사지을 수 없다면 기계가 주동이 되면서 농업을 용역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논산을 갔는데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때는 큰 테두리속에서 시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중앙에서는 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일선에 가보면 각각입니다. 저도 이번에 각도에 하나씩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가 있는 논산을 갔는데 경지정리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투입된 농기계와 수확후 처리관계와 연결도 안되어 있고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경지정리를 한다면 작부체계가 직파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생산적인 면, 생산수단, 수확후 문제, 조직화 등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지방 자체단체에서 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놓고 행정체계등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고학균 회장】** : 다음은 안성군 공도면에서 기계화 전업농을 하시는 허근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 허근(안성군 기계화 전업농 대표)】** : 저는 현재 농촌에 처해있는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이 처해있는 실정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있기는 있는데 너무 연령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농의 혜택은 주어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전업농 육성 지원대상자 선정 요령이 수도작, 일반전작, 과수특작입니다. 여기에 축산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 수도작 하나로는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전에 제가 교육을 받을때 복합영농을 해야만이 UR을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저는 이

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UR이 온다해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사람중에의 한사람 입니다. 저는 전업농에 대해서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3년도에 낙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으로 3.5ha, 밭농사가 3ha됩니다. 제가 83년도에 목장하고 수도작을 할 때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실정이 하루아침에 노동력을 잃고 일을 안하게 된 동기가 88 올림픽 이후에 일손을 놓은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력이 많았습니다만 노동력이 없다 보니 저도 농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없다보니 기계도 사야하고 논농사 9,000평 지어봐야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농기계 한대에 최하 1,500만원, 2,000만원인데 그 값을 언제 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생각중에 복합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농이란 개인이 전업을 해서 복합영농으로 큰 기계 또는 작은 기계도 살수 있는데, 저는 큰 기계를 택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위탁영농 보다는 전업농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농을 하면 사람이 여러명이다 보니 기계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20% 보조를 해주는데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전업농을 하는 사람중에서도 심사를 해서 주게 되는데 20% 주는것 마저 서로 할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50%정도 보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력에 있어서, 50세 이하로만 전업농을 신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50세 전후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하로는 전업농을 하실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70세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55세 정도로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발표 3 : 농업기계화와 농지기반조성】 : 조범호 (농어촌진흥공사  
구조개선본부장)**

【고학균 회장】 : 다음은 농협중앙회 고무창 농기계사업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정토론 : 고무창(농협중앙회 농기계 사업단장)】 : 생산기반으로서의 농지기반의 정비는 농업기계화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UR 농산물협상의 잠정 타결로 우리 농업, 농민은 아무런 보호막없는 무한경쟁의 냉혹한 국제환경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실상을 냉정하게 따져 볼때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유리한 여건은 거의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은 일본, 대만에 비해서는 물론 동남아 보다는 별로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고, 농업경영의 규모화, 시설의 현대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생산기반의 확충은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농지기반의 정비는 경영의 규모화에서 가장 우선되는 과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토지이용형 영세규모의 농업에 있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서 농지기반 정비의 대단히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논의 경지정리사업에 치중하여 왔는데, '92년 현재 경지정리 면적은 623천ha로 논면적 1,315천ha의 47%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밭을 포함해서 전체 경지면적 207만 ha의 30%에 불과하다고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밭의 경우 경지정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의 경우도 필지당 평균면적 400평 규모라고 말씀하시고, 또 80년 이전에는 600~1,200평 이하로, '80년 이후에는 1,500평 규모로 추진함에 따라 영농조건이 좋은 평야지가 오히려 소규모로 정비되었으며, 밭은 경지정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필지당 규모가 영세한 것은 경지정리 후 농지배분 과정에서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한 청산자금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 농가가 경영하는 농지는 평균 8~9필지로 분산되어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정비된 지역도 농로가 부족

하거나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 농가의 동일 작목 재배포장이 여러 들녘에 산재해 대형 기계화 체제에 부적합하여 영농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대형 농기계의 소유자가 임작업을 기피하게 되므로 영세농가도 어쩔 수 없이 농기계를 구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결국 생산비만 높이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값비싼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이용효율이 크게 저하되어 실제로는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기계화로 대체되지 못하고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농효율이 크게 저하되어 생산비 인하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필지규모가 커지면 자작지든 임차지든 기계화에 의한 영농효율은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먼저 논, 밭의 경지정리에 의한 필지의 대규모화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지당 규모는 1,500평~3,000평 규모로 확대해야 하고, 현재 경지정리 추정규모는 논 신규정리 377천ha, 논 재정리 356천ha, 밭 신규정리 150천ha로 총 883천ha로 추정되고 있고 소요예산도 약 1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기반 정비는 민간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조기에 완료하기는 어렵고, 동절기(11월~3월)에 가능하므로 농어촌진흥공사, 농조, 군공병, 건설회사 등이 지원하는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공병대의 대대적인 투입으로 장비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의 교환, 합병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지정리의 확대로 농가중심의 실질적인 농지집단지화 효과를 발휘하고, 자치단체를 중심으로한 경지정리지구의 농지의 교환, 합병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농가간의 교환, 합병의 경우 합병보조금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 밭, 야산이 혼재한 소규모지구로 어느 한 지목으로는 한계지에 해당하나, 정비후 대규모 농장조성이 기대되는 특정지구는 자치단체나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하여 정비후 다시 농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의 교환 합병시에는 취득세도 감면이 되도록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지정리에 따른 필지의 합병, 농가끼리의 교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청산금 등의 농지관리기금을 확대조성하여 지원하는 뒷바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된 들녘에도 대부분 일반 농토만 있을 뿐이고, 또한 협소하고 포장되어 있지 않아

중대형의 농기계의 이동과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는 들녘과 마을을 연결하는 기간농로가 부족하여 마을 진입로를 기간농로로 겸용하고 있고, 마을 진입로도 국도, 군도와 연결되어 농작업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형 농기계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농로를 개설하고 포장하여 일반농로와 연결되는 들녘에 기간농로의 확장 및 포장이 경지기반 확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도의 경지정리 실적은 18,543ha로서 당초 30,000ha의 61.8%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 예산단가도 1ha당 15,900천원으로 실제 사업착수단가인 18,000천원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 정부는 1997년까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중 167천ha의 논과 해방이전에 경지정리된 100천ha 등 모두 267천ha의 경지정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총 경지정리 추정규모는 783천ha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1963년부터 고생산성 농업의 실현을 위한 경지정리, 관배수시설, 농로정비 경지집단화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포장정비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고 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은 UR협상결과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의 조기 완료, 청와대에 농수산 수석비서관실을 신설,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농어촌 특별세 도입 등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어민은 물론 국민적 관심으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학균 회장】** : 다음은 김포 검단 두레위탁영농주식회사에 이호근씨께서 나오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 이호근(김포검단 두레위탁영농(주))】** : 저는 연구자가 아닌 현장에

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왜 대형기계를 필요로 하는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로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부에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민들의 가정사이면 정부나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외침을 했을 때 좀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지금과 같은 현실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농기계 현실의 실태 또 제가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면서 위탁영농회사는 무엇을 하는가?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적 배려가 있는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현대화는 현장에서 봤을때 콤바인이나 이앙기, 트랙터는 연중 가동을 할 수 있으니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농기계 가격이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하는데 효율성은 년 15~20일 정도 쓰입니다. 도시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서 집 한칸 마련한다는데, 농민들은 거침없이 사서 농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번 구입하면 거의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매년 부품을 교환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왜 내구연한이 8년씩 되는데 3년만에 처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거의 소모성 부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기계 이용에 따른 문제로는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는 어느 정해진 기간안에 치루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업기계를 쓰면서 적은 기계 가지고 내것만 하는 형편이 못됩니다. 저희들 같은 위탁영농회사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유는 많은 농가를 도와주라고 해서 생겼기 때문에 인력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많은 일을 짧은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앙기 한대에 약 870만원 정도인데 1년에 15일정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15일 안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영농인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저희들 같이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데는 농지가 담보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인데, 승용차 사면서는 담보 안맡겼습니다. 농민들이

사는 농기계는 거의 담보물에 의해서 삽니다. 단, 요즘 많이 좋아져서 1천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약 3억입니다. 3억중에 1천만원 신용대출하고 나머지 담보물이라고 하면 3억씩 담보물 갖고 있는 농민들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농기계가 효율적 경쟁력을 키울려고 하면 우선 농지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위탁이라는 말을 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법 제도상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위탁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농사에 일만 해주는데 종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경쟁력을 향상시킬수도 없고, 고품질의 농작물도 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를 영농회사로 고쳐서 저희들이 품종도 선정을 하고 제품까지도 팔았을 때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사 드실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면서 받은 보조 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기계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약 50%의 4,7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자금으로 약 3,300만원을 융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은 4,7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상법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것은 영농자금이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융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빌려쓰고 연말에 갚은 돈입니다. 영농자금도 2~3월에 신청하면 5~6월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구정만 지나면 바로 영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돈이 적기에 투입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쓰여졌으면 합니다. 그나마 설립후 3년이면 이 자금마저도 끊어집니다. 농기계 내구연한이 8년씩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쓰는 연한은 4~5년인데, 4~5년만 농사짓고 안지을 수도 없고 이때 부터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과연 경쟁력을 키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자금으로 3,300만원은 장비 들여놓는 창고를 짓기 위한 것인데 창고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임직원은 영농회사에 몸과 가족까지 맡기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세무 보고도 하고, 일반 상법에 의해서 전 직원이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이 년 1회 밖에 자금회전이 안되는데 나머지 기간은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단위농협에서는 운전자금이 대출이 안됩니다. 이런 모순된 점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 【발표 4 : UR 협상의 타결과 농기계산업의 대응방안】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지정토론 : 정만태(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UR이 타결이 되든, 안되든 간에 가장 이상적인 농기계는 값이 싸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향후 대응방안 내용으로 산업구조 개편에서 업종별 전문화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민간 자율기능조정이라는 역할로 볼때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생산비를 인하하는 방안은 국내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화라든지, 생력화, 부품에 호환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예를들면, 고기능을 요하는 트랙터 같은 기종에 있어서 해외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법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화나 세계화에 거슬릴 수 없는 추세인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분업 구조 틀속에 농기계 산업도 맥락을 갖추어서 나가야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중에서 어느정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중, 소형 기종에 있어서는 과감한 해외생산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간에 분업체제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은 주로 해외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국산화율이 진전된 기종도 있지만, 아직도 국

산화율이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과거에 기술이전하는 패턴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외국의 선진기업들과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이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계관련업체들이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시장으로의 확대진출도 국내 농기계 시장도 금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해외업체들이 국내에서 우리업체하고 합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업체들도 해외 진출하는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수출을 강화하고 생산비를 인하하는 맥락하고 같은 방향으로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정책지원 추세에서 볼 때 사실 지금까지 농기계 산업에 대한 정부에 정책이 일반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농기계산업 자체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것들이 크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UR타결 문제도 있고 해서 농기계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 물론 각 기업체가 해야 되지만 기업체는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는 우선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상호보완하는 차원에서 산·학·연도 좋고 거기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 1979년도에 이미 일본 농기계 산업에 장기 비전 제시 이런쪽에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앞으로 감축 대상이 될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같은 경우에는 리스제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산업 발전으로 볼때 농기계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리스 관계를 향후 연구해볼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학균 회장】** : 마지막으로 농기계업계를 대표해서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김상태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정토론 : 김상태(동양물산기업(주) 부사장)】 : UR타결에 대한 대응전략은 우선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대응전략에 있어서 비전 제시하라고 김만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는 농업기계가 비전을 제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농정에 대한 정책문제입니다. 10년, 20년후에 농사를 자율적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어떤 틀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투자를 할것인가 하는 것이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계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계가 아무리 국내에서 비전제시 해봤자, 정부에서 농사 이렇게 간다 하면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농정 정책을 확고하게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농기계도 따라서 구조조정하든지, 원가를 내리든지 하는 자구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농정에 방향이 철저하게 밝혀지고, UR이 현재 타결된 것이 잘못되던 잘되던간에 현재 타결된 선에서 어떻게 선결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보조금이 앞으로 삭감된다, 없어진다 하고 용자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몇년차부터 보조금은 몇% 삭감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자도 현재 5%인데 더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농민들에 소득 수준이 이정도 됐을텐데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얼마만큼 살 것인가를 우리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것 없이 비전 얘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국내의 대응전략은 농업정책과 국가의 정책이 최소한 제시되고 누구나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농업기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싸게, 사용하기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전략과 국내전략을 같이 말씀드리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서비스경쟁력입니다. 첫째 가격경쟁력을 보면 금년도 정부의 트랙터 공급 계획이 약 2만5천대입니다. 현재 4개 메이커에서 1개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5~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생산에서 트랙터 제일 많이 생산한 회사가 대동에서 35마력이 약 3천대이고 나머지는 1개 기종당 500대, 600대인데 이거 가지고 국제경쟁력에 맞출수 있겠는가? 조금전에 강박사님께서 구조조정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5개 메이커가 전문화 되겠습니까? 전체 판매량의 트랙터, 콤파인

이 80~90% 인데 트랙터와 콤바인 빼 놓으면 과연 농업기계 메이커로 조립이 가능하겠는가? 구조조정이 안될 것입니다. 결국 싸게 구매경쟁도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방안이 무엇인가? 문제는 트랙터나 콤바인의 자가 가공율이 얼마나 되는냐 따져보면 아마도 외주의존율이 60~70% 정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품의 표준화만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자기 모델 포기하고 공동 모델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메이커 스스로가 피부로 느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논리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쪽을 통합해서 규모화 하고 규모화 함으로서 자동화, 생력화하면 가격도 싸지고 품질도 안정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써비스인데 메이커들이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고학균 회장】** :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농림수산부에서도 나오셨고 연구소, 농협, 자검, 학계 그외 많은 업체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 되고 토론된 내용은 추후 보고서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토론 시간으로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삼 (대동공업(주) 기술연구소)】** : 저는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동공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중에서 위탁영농회사와 전업농이 공동으로 육성되고 있는데 공동으로 육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영농회사의 경우 시골은 고령화 되고 자식들이 도회지로 가고나서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서 돈을 받고 농사를 대신 지어 주는데 전업농을 육성하는데는 큰 장애요인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땅을 소유하고 싶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여럿이 지어 줍니다. 그런데 만일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지 않고 전업농을 육성한다면 고용자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업농을 하는 사람이 자기 논은 농사

를 못지게 되고 본인 스스로 농사를 포기하고 도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업농을 하는 사람한테 농기계 구입자금을 주어서 농기계를 사 놓으라고 하는데 생산비하고도 직결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도태되는 농지를 전업농을 육성하는 사람들이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전업농 한테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바꿔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동양물산 부사장님께서 부품 표준화가 살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준화를 한다해서 어떤 품목을 정해서 기업체에서 표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될려고 하면 설계단계에서 부터 합동으로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해서 설계단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 팀 구성을 어디서 주체가 되어서 할것인가? 농업기계 메이커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회, 조합같은 단체에서 육성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상태(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부사장)】** : 각 메이커가 전 부품을 표준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유사제품을 찾아 어느 한 메이커를 지정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공통된 것을 찾아서 표준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로우터리만 보더라도 각 메이커 마다 쇼벤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릅니다. 이래서야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비슷한것을 모아서 주면 생산자체가 규모화되고 자동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간섭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각 메이커가 부품을 모아서 한 업체에 주고 지도 관리하면서 표준화 쪽으로 나가면 단가도 싸지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학균 회장】** :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종전문화, 부품통일화, OEM 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리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업체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업체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식 (금성전선 이사)】: 부품 표준화는 각 메이커가 농업기계학회와 산학협동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부품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정하면 되고, 각 회사의 특징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각 회사 나름대로의 상품전략이라든지 제품전략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어려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하기 쉬운 부품부터 한다면 1~2년 사이에는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주관하면 서로 이권관계가 있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집에 3점링크를 몰아주면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계학회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가지 부품부터 출발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회장님께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균 회장】: 건설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말씀있으십니까?

【노상하(서울대 농공학과 교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술개발, 좋은 품질, 농산물 생산 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필요한 기술이 하루 아침에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기계회사에서 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연구다운 연구를 수행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농업기계분야의 경우 외국 또는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연구소, 회사, 대학 등에서 이러한 신학문을 한 고급인력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일부

대학에서 마저 말이 공개채용이지 실질적으로는 공개채용의 본 뜻을 살리지 못하고 편파적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기관에서는 고급인력을 적기적소에 유치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학균 회장】**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노상하 교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고급인력들이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연구소도 강화하시고 고급인력도 많이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류관희 교수님이나 강정일 부원장님께서도 고급인력 유치 얘기도 하고 기술개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 남는 길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대학교수들도 연구를 하지만 교수들은 강의를 6과목이상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두 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에 깊이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연구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첨단 기계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잠깐 가 보았는데 진흥청 산하 각연구소가 다 그렇습니다만 한사람이 한개 내지 두개의 연구제목을 맡습니다. 몇 사람이 한가지 연구를 착실히 해도 부족하데 지금 진흥청 연구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중(농업기계화연구소 이용조사과장)】** : 부품규격화에 관련되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바로 이문제가 학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심도있게 연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기초연구는 이전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특수법인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

진기구로 바꾸었고 바이오텍크놀리지를 생명기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고 기초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쓰쿠바에 있는 국가연구기관으로 농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된 제품에 대한 응용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는 세계 굴지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초연구, 개발연구, 응용연구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구를 최소한도 장기적으로 기능분담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진흥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학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학계에서는 기초연구, 진흥청에서는 응용연구, 업체에서는 1개 업체에서는 곤란하다 하면 몇개 업체에서 종합연구소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출연기관을 만든다든지, 무엇인가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어느것을 합치고 없애고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고학균 회장】** :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종료할까 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소원이 금년에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